

칼럼



이진 (편집부장)

벚꽃의 절정이 다가왔다. 거리는 벚꽃 천지이며, 분홍빛으로 물든 거리는 한없이 아름답지만 하다. 낮에는 꽃 무더기가 바람에 흔들리며 봄을 알리고 밤에는 꽃등을 환히 밝혀 봄밤을 더 밝히고 있다. 이러한 봄 거리를 나서면 낙화를 준비하지 않은 꽃그늘 아래로 여러 알록달록한 풍경을 맞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풍경을 망치는 흉물이 거리 곳곳 존재한다. 봄의 아름다움과 상반되고 덕지덕지 나붙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옥설과 비방의 날부끄러운 언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바로 현수막들이다.

정치 현수막들은 전국에 걸쳐 길거리 공해의 주범으로 뽑힌다. 당연히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언론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아도 개선의 여지는 보이지 않는다. 도시 미관을 해치고 혐오만 부추기는 현수막들은 봄을 망치고 있다.

정당의 정치 현수막들은 하나같이 상대를 비방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정권 망국적 친일야합', 진보당은 '일본에 바칠 다음 선물리스트'라는 글귀와 함께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는 현수막을 내걸었으며, 국민의힘의 경우 이를 반박하듯 민주당을 상징하는 푸른색 배경의 '나라 망치는 거짓선동'이라는 글귀와 함께 다양한 현수막을 내걸었다. 여의도에서 정치의 무관심과 혐오를 멈추자며 외친 정치권이 혐오를 거리로 끌고 온 모순적인 상황이다. 근거도 없이 선동이니 매국노니 욕만 적어둔 현수막은 웅변한 광고 현수막들보다 꼴 보기 싫다.

다른 현수막들은 '도심 미관을

해친다'며 수거하고, 정당이 붙였다는 이유만으로 정치 현수막을 수거하지 못하는 건 내로남불이 아니고서야 설명할 수 없다.

이러한 현수막 정치는 정치권 그들만의 특권이 작용하고 있다. 지난 해 12월 국회에서 정당 현수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따라 문제가 발생했다. 정당이 별도 허가나 신고 없이도 정치적 현안이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한 현수막을 내걸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최대 15일간만 게시할 수 있다는 법적 기준 외에는 개수나 위치 제한도 피해간다. 형평성이라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으며, 현수막 제작 비용도 국고보조금이나 정치 후원금에서 나가니 이런 후안무치가 없다. 당초 목적과는 달리 다른 정당이나 정권을 비방하는 자극적인 현수막이 난무하면서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혐오감이나 통행에 불편함을 가중시킨다는 걸 왜 모를까.

현수막 공격의 화살은 고스란히 정치혐오로 되돌아 온다는 사실을 모르는 곳은 정치권뿐이다. 여의도식 정치문법이 활개치는 현수막은 한국정치의 후진적인 모습을 고스란히 드러내기도 한다.

정치담론을 두 당이 장악한 듯 거대 양당의 혐오 현수막의 개수는 다른 군소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더 문제는 똑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국회의원 혹은 당협위원장의 사진과 이름만 바뀐 채 도시 곳곳에 내걸려 있다는 사실이다. 현수막에서도 중앙정치에 불모로 잡힌 지방정치의 현주소가 잘 드러나는 것이다. 정치 현수막에 지역 현안이 등장하는 것은 가물에 콩 나듯 한다. 지역을 대변하는 정치인보다는 중앙정치를 잘 대변할 '막대기 정치인'이 있는 듯하다. 중앙정치에 불모로 잡힌 건 지역정치뿐만 아니라 여의도 정가에서도 존재한다. '자기정치를 비판하는 수사로 사용된다.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소신에 찬 발언

과 행동으로 정치적 야망을 펼치려 하면 사방팔방에서 주저앉히려는 세력과 맞서야 한다. 즉, 권력자의 뜻과 당의 방침에 어긋나면 가차 없이 조리돌림을 당한다.

봄과 함께 찾아온 꽃이 지고나면 다시금 '정치 공해'에 노출될까 우려스럽다. 지역정치, 자기정치는 없고 서울과 여의도에서 공장처럼 찍어 낸 현수막이 국회의원, 당협위원장의 이름과 사진만 달린 채 전국 곳곳에 나부낄 걸 생각하니 진절머리가 난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선거일 180일 전인 8월부터는 유권자의 1인 현수막 게시도 가능해져 현수막 난장판은 극을 달릴 것이다.

이런 혐오와 프레임, 거짓과 선동이 담긴 현수막이 거리로 나오는 것이 과연 옳은지 정치권은 생각해보아야 한다. 현재 정치권에서의 개싸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시시비비를 따질 거면 여의도 그들만의 무대에서 하길 바란다. 아름다운 봄, 혐오의 정치가 망치지 않았으면 한다.

칼럼



이동희 (사회부 차장)

2022년 합계출산율은 전년 대비 4.4% 감소해 0.78명이다. 2023년 1월 출생아 수는 전년 동월 대비 6% 감소했다.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합계출산율 평균은 1.59명이다. △프랑스 1.79 △독일 1.53 △이탈리아 1.24 △영국 1.56 △미국 1.64 △캐나다 1.5 △일본 1.33 △대한민국 0.84로 출산율이 낮다고 알려진 일본과 이탈리아보다도 낮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은 저출산 문제를 안고 있지만, 우리나라가 무척 가파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먼저 출산율 감소가 왜 문제인

지 살펴보자. 경제적으로 경제활동이 활발한 청년층의 인구가 감소하면 거시경제적으로 GDP가 하락할 것이다. 소비하는 인구가 줄면 일반적으로 내수가 활성화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또, 우리나라는 중공업과 같이 인구가 받쳐줘야 성장하는 산업이 많고, 천연자원이 부족해 인재 육성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체적인 인구가 감소하면 일할 사람이 줄어 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을 지출할 인구가 줄면 노후에 관련 혜택을 받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주 최대 69시간 제 도입 △국민연금 고갈 △지역 격차 해소 등 다양한 문제와 사회적 논의를 안고 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책이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또, 이러한 정부 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 것에 도움 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최대 주 69시간 동안 근로할 수 있는 근로시간 개편안

을 발표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상 제조업 분야 등에서 유연한 근로가 필요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정부는 주 52시간의 틀을 유지하되, 노사 합의로 '주 단위가 아닌 '월·분기·연 단위로 근로시간을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복잡한 규정과 사회적 분위기 속, 체계가 잡히지 않은 중소기업이 유연하게 근로시간을 지킬 수 있을지 미지수다. 이런 노동조건은 출산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030 세대가 사회에 진출해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가정을 이루고 아이를 낳기를 바라다면 장시간 노동과 연차 쓰는 것을 눈치 봐야 하는 사회적 현실을 바꿔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건강과 관련된 고려는 미뤄둔 채 더 열심히 일하라고 한다.

다른 주요 이슈 중 하나는 국민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는 사실상 젊은 인구의 돈을 고령 임금 수여자에게 불려서 주는 제도다. 필수로 들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에

기도 하다. 그러나 현재 국민연금 정책은 청년 인구를 배려해 숨통을 트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이 걷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는 지속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다. 왜냐하면 연금은 노후에 받을 수 있다는 신뢰가 보장되어야 하는데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젊은 세대의 불만이 계속 쌓이면 제도 자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지역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산다. 이는 도시국가 수준이다. 수도권에 가진 △교육 △양질의 일자리 △문화시설 △교통 등의 인프라는 지방이 따라갈 수 없으며, 인구가 그곳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다. 이는 수도권의 경쟁이 과열되고 지방은 소멸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현상이 지속되면 수도권과 지방 모두 장점을 잃고 공멸할 수 있다. 중앙정부는 지역 격차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수도권 대학

에 첨단 학과 정원을 늘리고 규제를 푸는 수도권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책이 초중고 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에 준다거나 지자체에 대학 재정지원예산 집행을 전가하는 등 지방의 문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방향으로 보인다. 또, 지역경제를 살리자는 취지의 지역 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등 이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다.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에 권한을 위임한 것이라면 시간을 두고 지방이 자립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정부의 △근로시간 △국민연금 △지역 격차 문제의 해법을 보면 청년들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녕 우리나라, 출산율이 걱정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세대에 △양질의 일자리 △주거 환경 △교육을 주고 동지를 틀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책임'이 아닌 마땅한 '권리'를 줘야 한다.

2022 합계출산율 0.78...청년정책 시급하다

**답에 해당하는 글자를 표에서 모두 지운 뒤 남은 글자를 조합하면 정답이 나옵니다!
건대학보사 인스타그램 DM으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한 분을 추첨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1. 이 달 7일, 우리캠퍼스는 000을 대상으로 한 문화유적탐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2. 이음교육시스템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비교과 활동을 통해 000포인트 장학 혜택을 누릴 수 있다.
3. 2023학년도 보궐선거를 통해 선발전 00총학생회는 학생들과 소통으로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했다.
4. 최근 만화영화 '슬램덩크'의 강백호를 떠올리게 하는 우리캠퍼스 000선수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5. 오늘날 인공지능의 발전을 보여주는 대표적 예시는 챗000 이라고 할 수 있다.
6. 우리캠퍼스 학생홍보대사 건우건희는 올 해 0000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건대학보 낱말퀴즈

G	승	세	림	다
국	중	제	간	고
빈	P	신	이	드
움	파	교	생	최
T	팅	입	사	류